

2021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 경 정 (1교시) -



성 명 :

응 시 번 호 :

응시자 유의사항

- ※ **경정(1교시) 시험 과목 : 국제법(01), 행정법(04)**
-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해 양 경 찰 청

9. 다음 중 국제법상 조약의 체결과정 순서로 가장 올바르게 배열한 것은?

- ① 교섭→서명에 의한 인증→비준→비준서교환→등록
- ② 교섭→비준→비준서교환→서명에 의한 인증→등록
- ③ 교섭→비준→서명에 의한 인증→등록→비준서교환
- ④ 교섭→서명에 의한 인증→비준→등록→비준서교환

10. 정부의 승인과 관련된 다음의 설명에서 빈칸에 들어갈 말이 가장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정부의 승인은 재량행위라고 인정되지만 승인의 재량성을 제한하려는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었다. 정부승인에 대해서는 헌법에 위반되는 정부를 승인하지 말자는 주장을 (㉠)라고 하고, 실효적으로 정부가 만들어 지면 비합법적으로 수립된 정부라도 승인하자는 주장을 (㉡)라고 한다. 정부승인에 대한 최근의 국가들의 관행은 (㉢)를 취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다.

- | | | |
|----------|----------|----------|
| ㉠ | ㉡ | ㉢ |
| ① 스티븐 주의 | 토바르 주의 | 제퍼슨 주의 |
| ② 토바르 주의 | 에스트라다 주의 | 스티븐 주의 |
| ③ 토바르 주의 | 제퍼슨 주의 | 에스트라다 주의 |
| ④ 스티븐 주의 | 토바르 주의 | 에스트라다 주의 |

11. 다음 중 국가의 묵시적 승인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외교관계의 수립
- ㉡ 통상대표부 설치허가
- ㉢ 범죄인 인도
- ㉣ 상주외교사절의 교환
- ㉤ 미승인국 국민에 대한 비자 발급
- ㉥ 영사인가장 발급

-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12. 다음 중 2001년 UN국제법위원회의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초안」에 규정된 손해배상의 유형으로 가장 옳은 것은?

- ㉠ 원상회복 ㉡ 자위 ㉢ 동의 ㉣ 만족

- ① ㉡, ㉣ ② ㉠, ㉢ ③ ㉠, ㉣ ④ ㉡, ㉢

13. 다음 중 「UN헌장」 제1조상의 UN의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등에 의한 어떠한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촉진한다.
- ② 사람들의 평등권 및 자결의 원칙에 대한 존중을 기초로 하여 국가 간 우호관계를 발전시킨다.
- ③ 평화의 파괴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국제적 분쟁이나 사태의 조정 및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 ④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또는 인도적 성격의 국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 협력을 달성한다.

14. 다음 중 국제연합 총회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선출
- ② 국제연합 사무총장의 임명
- ③ UN회원국이 아닌 국가의 ICJ 규정 당사국으로의 결정
- ④ 국제연합 예산안의 심의 및 승인

15. 우리나라 군함이 부산으로 귀항 중 공해상에서 일본 유조선에 약탈하고 있는 국적불명의 해적선을 발견하고 이를 추적하여 나포하였다. 다음 중 이 군함이 해적선을 추적하여 나포할 수 있는 국가관할권에 대한 이론적 근거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수동적 속인주의
- ② 보호주의
- ③ 속지주의
- ④ 보편주의

16. 다음 중 외교 면제와 특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외교관은 접수국의 형사재판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를 향유한다.
- ② 접수국의 국민이 아닌 개인적 사용인은 봉급에 대한 세금에서 면제되지 않는다.
- ③ 외교관의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 중 접수국의 국민이 아닌 자는 접수국의 형사재판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된다.
- ④ 외교관은 그가 접수국의 국민인 경우에도 그의 직무수행 중에 한 공적행위에 대해서는 재판관할권으로부터 면제를 향유한다.

17. 다음 중 국제법 성문법전화 과정에 관련된 항목들을 시대 순으로 가장 올바르게 배열한 것은?

- ㉠ 국적법의 저축에 관한 조약
㉡ 대륙붕에 관한 협약
㉢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 국제법 위원회의 창설

- ① ㉠ - ㉤ - ㉡ - ㉢ - ㉣
② ㉤ - ㉠ - ㉡ - ㉣ - ㉢
③ ㉡ - ㉢ - ㉣ - ㉠ - ㉤
④ ㉢ - ㉡ - ㉣ - ㉤ - ㉠

18. 다음 중 국제법상 범죄인인도 제도와 가장 관련이 없는 것은?

- ① 국내구제완료의 원칙
② 최소한의 중요성의 원칙
③ 범죄특정의 원칙
④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

19. 다음 중 국제법상 국제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제기구가 국제법상 법인격을 갖는 것과 특정 국가 내에서 법인격을 인정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② 국제기구가 국제적 청구능력을 가진다는 것이 국제사법재판소의 입장이다.
③ 국제기구는 일반적으로 그 목적달성과 임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조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1986년 「국가와 국제기구간 또는 국제기구 상호간의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6조에 따라 국제기구의 조약 체결능력은 그 기구의 규칙에 따르는 바, 국제기구는 설립조약상의 명문규정이상으로 조약체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20. 다음 중 국제법상 국내문제불간섭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내문제는 국가의 대내적 문제와 대외적 문제를 포함하므로 영토적 개념에 기반을 두지 않는다.
② 국제사법법원의 1986년 니카라과 사건 판결에 따르면 자발적 경제원조의 중단은 불간섭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③ 국내문제인가 여부는 고정적이고 불변적이 아니라 유동적이고 가변적이다.
④ 국제연맹 규약은 전적으로 국내문제에 대한 간섭을 금지한다.

21. 다음 중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상 내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운하는 연안국의 내수에 해당하지만 국제적으로 중요한 국제운하는 조약을 통하여 이용이 개방되어 있다.
② 연안국은 내수로 진입한 외국 민간선박의 내부사항에 대하여 자국의 이해가 관련되어 있지 않는 한 관할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다.
③ 항만, 하천, 만, 직선기선의 내측 수역은 내수에 포함된다.
④ 연안국이 새로이 직선기선을 적용하여 영해가 내수로 변경된 수역에서는 외국 선박의 무해통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22. 다음 중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상 무해통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통항은 연안국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을 해치지 아니하는 한 무해하다.
② 외국 선박이 타국의 영해에서 어로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이를 무해한 통항으로 보지 않는다.
③ 연안국은 영해를 통항하는 외국선박에 제공된 특별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④ 연안국이거나 내륙국이거나 관계없이 모든 국가의 선박은 동 협약에 따라 영해에서 무해통항권을 향유한다.

23. 다음 중 1972년 「우주 물체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한 협약」에 따른 책임문제의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UN헌장」과 1967년의 「우주조약」을 포함한 국제법과 일치하지 않는 발사국의 활동 결과로 야기된 손해에 대해서는 피해국의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발사국이 절대책임을 진다.
② 발사국은 자국 우주물체가 지구 표면에 또는 비행 중의 항공기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 보상을 지불할 절대적인 책임을 진다.
③ 국제책임은 우주물체의 발사를 의뢰한 국가가 부담하고 그 발사를 실시한 국가는 면책이 된다.
④ 비정부주체가 우주물체를 소유하고 발사한 경우에 대해서도 소속국이 국제책임을 져야 한다.

24. 다음 중 공해에서의 관할권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선박충돌로 인하여 가해선박 선장의 형사책임이 발생한 경우 형사절차는 그 선장의 국적국에 의해서도 제기될 수 있다.
 - ② 군함이 해적행위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타국의 사(私)선박에 대하여 행하는 검문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된다.
 - ③ 군함 이외의 군용항공기와 정부공용선박은 임검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④ 선박은 한 국가의 국기만을 게양하고 항행하며 공해에서 그 국가의 배타적 관할권에 속한다.
25. 다음 중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상 해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해 또는 국가관할권 밖의 장소에서 행해진 해적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
 - ② 해적행위의 주체에는 사선(私船)은 물론 사항 공기(私航空機)의 승무원과 승객도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③ 모든 국가는 해적행위를 자국 법원에서 자국의 국내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
 - ④ 모든 국가는 공해상의 해적선박과 해적항공기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26. 다음 중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제해협의 경우 영해의 폭은 영해기선으로부터 3해리를 초과할 수 없다.
 - ② 심해저제도는 인류의 공동유산 개념에 입각해서 제도화된 것이다.
 - ③ 대륙붕의 외측한계는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 이상일 수도 있다.
 - ④ 군도기선을 설정한 군도국가의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의 폭은 군도기선으로부터 측정한다.
27. 다음 중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상 대항국 또는 인접국간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의 경계획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중간선(median line) 또는 등거리선(equidistance line) 원칙을 적용한다.
 - ② 형평한 해결(equitable solution)에 이르기 위하여 국제법에 기초하여 합의하도록 한다.
 - ③ 육지의 자연적 연장을 최대한 존중한다.
 - ④ 해양자원의 공평한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28. 다음 중 1992년 UN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것이 아닌 것은?
- ① 기후변화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 ②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 ③ 의제21(Agenda 21)
 - ④ 오존층보호협약(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Ozone Layer)
29. 다음 중 1992년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 협약에 대하여는 어떠한 유보도 행할 수 없다.
 - ②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산화탄소 등의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하고 있다.
 - ③ 청정개발체제, 공동이행제도, 배출권거래제도 등을 도입하였다.
 - ④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30. 다음 중 국제환경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지속가능한 개발’은 환경보존을 위하여 경제개발을 우선시하려는 개념이다.
 - ② 환경보호에 시장 지향적 개념으로 도입된 제도가 배출권 거래이다.
 - ③ 미국은 교토의정서에 비준하지 않았으며 현재 동 의정서는 발효되지 않은 상태이다.
 - ④ 지구의 환경보호를 위하여 교토의정서에 참가하지 않는 국가에게도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31. 다음 중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T)」 제24조에 열거되어 있는 지역경제통합의 형태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세동맹
 - ②特惠무역지대
 - ③ 자유무역지대
 - ④ 관세동맹 또는 자유무역지대의 창설을 위한 잠정협정

32. 다음 중 1963년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명예영사관을 장으로 하는 상이한 국가 내의 2개의 영사기관간의 영사행낭의 교환은 당해 2개 접수국의 동의 없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② 파견국의 영사관원이 접수국 내에서 외교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영사관원은 접수국 내에서 외교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
- ③ 접수국에서 파견국 영사관원의 외교활동 수행이 허용된 경우, 영사관원이 중대한 범죄를 범하게 되면 접수국 사법부의 결정에 따라 체포될 수 있다.
- ④ 영사기관의 소재지와 등급은 파견국에 의하여 결정되며, 접수국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다.

33. 다음 중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상 유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유보는 일방적 성명이지만 그 효과는 상호주의적이다.
- ② 유보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구두로도 행할 수 있다.
- ③ 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유보는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고 유보수락국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 ④ 유보제도는 다자조약의 당사국 범위를 확대하는 효과를 갖는다.

34. 다음 중 국제중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중재법정의 결정에 불복하는 당사국은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중재재판의 준칙은 당사국의 합의로 결정하며, 필요하다면 국내법도 준칙으로 활용될 수 있다.
- ③ 중재재판의 당사국 사이에 합의만 성립되면 어떠한 분쟁도 중재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
- ④ 중재법정의 결정은 분쟁당사국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다.

35. 다음 중 국제사법재판소(ICJ)가 무해통항권 침해 문제를 다룬 사건은?

- ① 영국 - 노르웨이 어업 (Anglo-Norwegian Fisheries) 사건
- ② 말레이시아 - 싱가포르 페드라 브랑카 (Pedra Branca) 사건
- ③ 영국 - 알바니아 코르푸해협 (Corfu Channel) 사건
- ④ 독일 - 덴마크, 독일 - 네덜란드 북해 대륙붕 (North Sea Continental Shelf) 사건

36. 다음 중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모든 UN 회원국들은 재판소에 회부되는 사건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 ② UN안전보장이사회 권고에 의해 총회가 결정하면 국제연합의 비회원국에게도 국제사법재판소에의 제소권이 인정된다.
- ③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심의 청구가 가능하다.
- ④ 선택조항 수락 시 ‘조약의 해석’, ‘국제법상의 문제’, ‘확인되는 경우, 국제의무의 위반에 해당하는 사실의 존재’, ‘국제의무의 위반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배상의 성질 또는 범위’의 네 가지 사항 중 일부만 선택하여 수락을 선언할 수도 있다.

37. 다음 중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ICJ의 모든 재판관은 재판소의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 외교특권 및 면제를 향유한다.
- ② ICJ가 관할권을 가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문제는 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결된다.
- ③ 선택조항을 수락한 국가는 모든 국가와의 관계에서 ICJ의 강제관할권의 적용을 받는다.
- ④ ICJ는 사정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각 당사자의 각각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취하여야 할 잠정조치를 제시할 권한을 가진다.

38. 다음 중 세계무역기구(WTO)의 「보조금 및 상계 조치에 관한 협정」상 보조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계관세는 상계관세의 종료가 보조금의 지급과 피해의 계속 또는 재발가능성이 있다고 판정하지 않는 한 부과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료된다.
- ② 농업에 관한 수출보조금에 대해서는 WTO의 ‘농업에 관한 협정’이 적용된다.
- ③ WTO 회원국은 자국산 특정 제품의 수출실적에 비례해서 그 제품을 생산하는 자국 기업에 수출장려 보조금을 줄 수 없다.
- ④ WTO 회원국은 자국산 특정 제품에 보조금을 지급한 결과 다른 회원국의 생산업계에 피해를 주는 경우 피해를 당한 국가는 WTO 분쟁해결 기구에 제소할 수 있다.

39. 다음 중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조약의 체결 당시 일반국제법의 강행규범과 충돌하는 조약은 무효이다.
- ㉡ 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조약을 탈퇴한 국가라도 탈퇴 전 그 조약의 시행으로 발생한 그 국가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 ㉢ 체약국이라 함은 조약의 효력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그 조약에 대한 기속적 동의를 부여한 국가를 의미한다.
- ㉤ 조약이 강행규범과 상충되어 무효인지 여부에 관한 분쟁은 바로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결정에 의탁하여야 한다.
- ㉥ 누구든지 적절한 전권위임장을 제시하는 경우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를 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국가를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 ㉦ 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다자조약은 그 당사국 수가 그 발효에 필요한 수 이하로 감소하는 사실만을 이유로 종료하지 아니한다.

- ① 3개
- ② 4개
- ③ 5개
- ④ 6개

40. 다음 중 세계무역기구(WTO)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세계무역기구는 GATT체제와 같이 일차적으로 총의(consensus)로 의사결정을 한다.
- ② 각 회원국은 세계무역기구에 대하여 이 기구가 자신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부여한다.
- ③ 각 회원국은 세계무역기구의 회원국 대표에 대하여 이들이 세계무역기구와 관련하여 자신의 기능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부여한다.
- ④ 각 회원국은 각료회의와 일반이사회에서 국제 교역량에 비례하여 투표권을 가진다.

행 정 법

1. 다음 중 법치행정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판례에 의함)

- ① 법률우위의 원칙에서 법은 형식적 법률뿐 아니라 법규명령과 관습법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법이다.
- ② 법치행정원리의 현대적 의미는 실질적 법치주의에서 형식적 법치주의로의 전환이다.
- ③ 법령의 규정보다 더 침익적인 조례는 법률유보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 ④ 법률유보의 원칙은 행정권 발동에 있어서 조직규범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한다.

2. 다음 중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률의 위임에 의한 법규명령의 제정에 있어서 포괄적 위임 금지
- ② 행정의 내부조직이나 특별행정법관계 내부에까지 법률 유보 적용확대
- ③ 헌법재판소에 의한 위헌법률 심사제
- ④ 행정의 탄력성과 합목적성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 입법권의 강화

3. 다음 중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비례의 원칙에 의할 때 공무원이 단지 1회 훈령에 위반하여 요정 출입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한 파면처분은 위법하다.
- ②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은 평등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다.
- ③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그와 실체적인 관련이 없는 상대방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 ④ 신뢰보호 원칙에서 행정기관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명시적이어야 하고 묵시적인 경우에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4. 다음 중 행정법의 법원(法源)으로서 헌법이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②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 ③ 감사원규칙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에 관한 규정

5. 다음 중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청은 법령상 규정된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② 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에 도달하기만 하면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수리한 경우에 비로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 ③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의 개설 등록은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④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 수리행위에 신고 필증의 교부가 필수적이므로 신고필증 교부의 거부는 행정소송법상 처분으로 볼 수 있다.

6. 다음 중 법규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② 행정각부의 장이 정하는 고시는 법령의 규정으로부터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아 그 법령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진 경우라도 그 형식상 대외적으로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 ③ 법규명령의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나중에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으로 볼 수 있다.
- ④ 법규명령이 구체적인 집행행위 없이 직접 개인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는 경우 처분성이 인정된다.

7. 다음 중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청은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할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상위법령에서 세부사항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는데, 이를 고시로 정한 경우에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
- ③ 대통령령을 제정하려면 국무회의 심의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 ④ 행정규칙이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8. 다음 중 행정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규칙을 위반하는 행위는 직무상의 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 ② 대법원은 행정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법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절차적 규정을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으로 본다.
- ③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의 위임에 따라 입찰자격제한기준을 정하는 부령은 행정내부의 재량준칙에 불과하다.
- ④ 훈령, 지시, 예규, 일일명령 등 행정기관이 그 하급기관이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는 지시문서이다.

9. 다음 중 재량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인 행정청에게 있다.
- ② 판례에 의할 때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는 재량행위로 보고 있지 않다.
- ③ 공유수면점용허가는 특정인에게 공유수면이용권이라는 독점적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처분으로서 그 처분의 여부 및 내용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 ④ 재량행위에 있어서도 비례원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행위가 된다.

10. 다음 중 강화상 특허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재개발조합설립인가
- ㉡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변경허가
- ㉢ 사립학교법인 임원에 대한 취임승인행위
- ㉣ 서울특별시시장의 의료유사업자 자격증 갱신발급행위

- ① ㉠, ㉡ ② ㉠, ㉢ ③ ㉡, ㉣ ④ ㉢, ㉣

11. 다음 중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률효과의 일부배제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 ② 장래의 도래가 불확실한 사실에 행정행위의 효력 발생을 의존시키는 조건을 정지조건이라 한다.
- ③ 부관은 주된 행정행위와 실질적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 ④ 부담을 불이행하면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한다.

12. 다음 중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공정력, 불가쟁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② 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고 그 후행행위인 건축물철거 대집행계고처분 역시 당연무효이다.
- ③ 「경찰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찰관임용 결격사유는 경찰관으로 임용되기 위한 절대적인 소극적인 요건으로서 임용당시 경찰관임용결격 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임용권자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
- ④ 납세의무자가 부과된 세금을 자진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세액산출근거 등의 기재사항이 누락된 납세고지서에 의한 과세처분의 하자는 치유되지 않는다.

13. 다음 중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영업허가 취소처분이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영업허가취소처분 이후의 영업행위를 무허가 영업이라고 볼 수는 없다.
- ②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뢰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재량권 남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③ 철회는 적법요건을 구비하여 완전히 효력을 발하고 있는 행정행위를 사후적으로 그 행위의 효력을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에 향해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이다.
- ④ 행정행위의 철회의 절차는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엄격하게 이루어진다.

14. 다음 중 행정행위의 철회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 ② 허위사실기재로 인한 공무원 임용 취소
- ③ 중요한 공익상 필요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취소
- ④ 철회유보부 부관의 성취로 인한 주유소영업허가 취소

15. 다음 중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지도는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 한다.
- ② 강제성을 띠지 아니한 행정지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행정청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 ③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방식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④ 「국가배상법」이 정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비권력작용인 행정지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16. 다음 중 「행정절차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청이 접수받은 사안을 다른 행정청에 이송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의견제출은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할 수 있으나, 말로는 할 수 없다.
- ③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의 경우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이더라도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된다.
- ④ 행정청이 다른 행정청에 행정응원을 요청하는 경우 행정응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이 부담한다.

17. 다음 중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보안관찰법」 소정의 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는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에 해당한다.
- ② 공개청구된 정보가 수사의견서인 경우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더라도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지 않는 때에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회의관련자료나 의사결정 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은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 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
- ④ 공공기관이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를 공개는 하되,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하는 결정을 한 경우 이는 정보 공개방법만 달리한 것이므로 일부 거부처분이라 할 수 없다.

18. 다음 중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판례는 지문(指紋)을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 ② 「개인정보보호법」은 단체소송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 ③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 할 수 있다.
- ④ 정치적 견해, 건강, 사상·신념에 관한 정보는 민감정보에 해당한다.

19. 다음 중 경찰권의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률유보의 원칙상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찰권의 발동은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 ② 근거법규의 효과부분이 경찰행정청에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 하더라도 경찰행정청은 이를 의무에 합당하게 행사하여야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
- ③ 경찰소극의 원칙이란 경찰권이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서만 발동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 ④ 경찰평등의 원칙이란 경찰권의 행사에 있어서 성별·종교·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20. 다음 중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불심검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판례는 임의동행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연행된 피의자에게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은 당연히 인정되는 반면,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된 피내사자의 경우에는 접견교통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② 판례는 경찰관의 임의동행은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 ③ 경찰관의 동행요구에 따라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 ④ 불심검문을 위하여 경찰관이 질문을 할 때, 흥기의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21. 다음 중 행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치들 가운데
항고소송으로 불복할 수 없는 것만으로 묶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감염병환자의 강제입원
㉡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 체납처분으로서 공매처분
㉣ 불법주차된 차량의 견인조치
㉤ 경찰서장의 통고처분

- [illegible]

22. 다음 중 행정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조사기본법」에 의하면, 조사목적 달성을 위한 시료채취로 조사대상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였더라도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② 행정조사를 행하는 행정기관에는 법령 및 조례, 규칙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는 기관뿐만 아니라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까지 포함한다.
- ③ 「행정절차법」은 행정조사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④ 세무조사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23. 다음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할 때 보상금 지급의 원칙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개인별 보상의 원칙
- ② 사전보상의 원칙
- ③ 현물보상의 원칙
- ④ 사업시행자 보상의 원칙

24. 다음 중 「행정심판법」에 의해 행정청이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의 취지에 따라 재처분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는 재결은?

- ①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
- ②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부존재로 확인하는 재결
- ③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
- ④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을 절차가 부당함을 이유로 취소하는 재결

25. 다음 중 행정상 「국가배상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가배상은 공행정작용을 대상으로 하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은 당사자소송이다.
- ②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위법한 직무집행의 결과 잘못된 각하결정을 함으로써 청구인으로 하여금 본안판단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한 경우, 만약 본안판단을 하였더라도 어차피 청구가 기각되었을 것이라는 사정이 있다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③ 국가에게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헌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구체적인 입법 의무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애당초 입법부작위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 ④ 「국가배상법」은 국가배상책임의 주체를 국가 또는 공공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26. 다음 중 「국가배상법」상 영조물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실상 군민(郡民)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던 도로라고 하여도 군(郡)에 의하여 노선인정 기타 공용개시가 없었던 이상 이 도로를 ‘공공의 영조물’이라고 할 수 없다.
- ② 하천의 제방이 계획홍수위를 넘고 있더라도, 하천이 그 후 새로운 하천시설을 설치할 때 ‘하천시설기준’으로 정한 여유고(餘裕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정만으로 안전성이 결여된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 ③ 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 ④ 광역시와 국가 모두가 도로의 점유자 및 관리자, 비용부담자로서의 책임을 중첩적으로 지는 경우 광역시와 국가 모두가 「국가배상법」에 따라 궁극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된다.

27. 다음 중 「행정심판법」상 재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위원회는 의무이행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 ②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대하여만 미친다.
- ③ 재결은 서면으로 하며 재결서에 적은 이유에는 주문 내용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④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부처분이 재결에서 취소된 경우,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다시 어떠한 처분을 하여야 할지는 처분을 할 때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행정청은 종전 거부처분 또는 재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 할 수 없다.

28. 다음 중 행정소송의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를 직접 불복의 대상으로 제기하는 소송으로 취소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기관소송이 있다
- ②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이다.
- ③ 민중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
- ④ 당사자 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다.

29. 다음 중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대한 사항으로 무효등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되는 것은?

- ①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적용 ② 취소소송의 대상
- ③ 제소기간 ④ 사정판결

30. 다음 중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 행정청에 의해 부과된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3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로 한다.
 -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① ㉠, ㉡ ② ㉠, ㉡, ㉣
- ③ ㉡, ㉢, ㉣ ④ ㉢, ㉣

31. 다음 중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의 유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구 「광주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지급청구소송
- ② 광주광역시 문화예술회관장의 시립합창단원 재위촉 거부에 대한 소송
- ③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대한 미지급 퇴직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

32. 다음 중 행정소송의 피고적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회의장이 행한 처분의 경우 국회사무총장이 피고가 된다.
- ② 대통령이 행한 처분의 경우 국무총리가 피고가 된다.
- ③ 처분 등이 있는 뒤에 그 처분 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 ④ 당사자소송은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 주체가 피고가 된다.

33. 다음 중 판례가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을 부정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목욕탕 영업허가에 대하여 기존 목욕탕업자
- ㉡ 교도소장의 접견허가거부처분에 대하여 그 접견신청의 대상자였던 미결수
- ㉢ 보건복지부 고시인 「약제급여, 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의 취소를 구하는 제약회사
- ㉣ 전공이 다른 교수의 임용으로 인해 학습권을 침해당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교수 임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학과에 재학중인 대학생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34. 다음 중 판례상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인정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행정청이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 변경신청을 거부한 행위
- ㉡ 지방경찰청장의 횡단보도 설치행위
- ㉢ 국가인권위원회의 각하 및 기각결정
- ㉣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사용권장행위
-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혁신도시최종입지 선정행위

- ① 2개
- ② 3개
- ③ 4개
- ④ 5개

35. 다음 중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부작위위법확인소는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그 위법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나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정한 제소기간 내에 소를 제기해야한다.
- ② 소제기의 전후를 통하여 판결시까지 행정청이 그 신청에 대하여 적극 또는 소극의 처분을 함으로써 부작위상태가 해소된 때에는 소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어 당해 소는 각하를 면할 수가 없다.
- ③ 법원은 단순히 행정청의 방치행위의 적부에 관한 절차적 심리만 하는게 아니라 신청의 실체적 내용이 이유있는지도 심리하며 그에 대한 적절한 처리방향에 관한 법률적 판단을 해야한다.
- ④ 집행정지결정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되지 않는다.

36. 다음 중 취소소송 제기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재결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 ②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란 처분을 받은 자가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 한 날을 의미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③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였더라도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소제기가 가능하다.
- ④ 통상 고시에 의한 행정처분의 경우 판례는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본다.

37. 다음 중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을 때
- ②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 ③ 행정청이 사실심의 변론종결 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
- ④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때

38. 다음은 「행정소송법」과 「행정심판법」의 내용이다.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가)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나)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행정소송에 관하여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 | | 가 | 나 | 다 |
|---|------|------|-------|
| ① | 90일 | 180일 | 민사집행법 |
| ② | 90일 | 180일 | 형사소송법 |
| ③ | 180일 | 1년 | 민사집행법 |
| ④ | 180일 | 1년 | 형사소송법 |

39. 다음 중 행정소송의 심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행정소송법」 제26조는 당사자 소송에도 준용된다.
- ② 취소소송의 직권심리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행정소송법」 제26조의 규정을 고려할 때 행정소송에 있어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범위를 초월하여 그 이상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 ③ 사실심에서 변론종결시까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던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경우 그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행정소송에서 기록상 자료가 나타나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았다면 행정소송의 특수성에 비추어 법원은 이를 판단할 수 없다.

40. 다음 중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② 처분청이 재조사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 반하여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 ③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행정심판에서 행정심판 위원회에 의한 형성적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된 행정처분은 재결 자체에 의하여 당연히 취소되어 소멸된다.